

LG 'G6' 내년 2월말 출시할 듯

1월부터 부품조달 계획 전달... 출시시기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기선제압·선점효과' 노린 듯

LG전자가 차세대 전작 스마트폰 G6를 예년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 이르면 내년 2월말께 내놓을 계획이다.

삼성 '갤럭시노트7' 공백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2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LG전자는 G6 양산을 위해 부품업체들에게 내년 1월부터 부품 조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G6는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출시될 예정이다.

내년 2월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이동통신박람회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17에서 제품을 공개한 직후 바로 출시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선보인 모듈형 스마트폰 G5가 지난 3월31일 출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G6는 예년에 비해 한 달가량 앞당겨 나오는 것이다.

MC사업본부의 주력상품인 G시리즈와 V시리즈 전담조직을 별도 가동하고 있는데 G시리즈 개발조직은 하반기 신제품 V20이 출시되기 전부터 G6 개발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G6에 대한 세부적인 스펙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체형 배터리, 휴대 인식, 무선 충전, 방수 등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차기 제품 출시일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LG전자는 올해 스마트폰 사업에서 부진한 성과를 거뒀다. 혁신을 테마로 잡은 G5가 시장에서 외면당하면서 MC(모바일커뮤니케이션) 사업부의 적자 규모는 올 한해에만 1조2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J헬로비전 '케이블·IP TV 전송방식 결합 솔루션' 승인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과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의 전송방식을 결합한 CJ헬로비전의 '케이블 융합 솔루션(CCS)'이 전격 승인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CJ헬로비전의 'CCS'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CCS는 기존 케이블TV의 방송신호를 케이블방식(RF)으로 송신하는 대신, IPTV와 같이 자사의 인터넷망을 통해 인터넷프로토콜(IP) 전송방식으로 송신하는 새로운 융합형 전송방식이다.

방송·통신용 선로가 하나의 선로로 유선방송과 기기급 인터넷 동시 제공이 가능해져 효율성 높은 망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연말정산 기능 무료로 KT가 기업용 업무포털 '비즈메카 이지'에서 연말정산 기능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스마트폰 사업에서 크게 남매를 본 LG전자는 제품적인 장점과 함께 상황적인 모든 이점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 공백이라는 효과를 놓치면 안된다는 계산이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의 경우 먼저 시장에 나올 경우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5가 실패한 원인의 하나로 갤럭시S7 보다 늦게 시장에 나왔다는 점이 꼽히고 있는

것도 이같은 결정의 배경이다. 삼성은 '갤럭시 노트7' 단초가 됐던 발화의 원인을 밝혀내지도 못한 상태라 이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차기작인 갤럭시S8 출시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G전자가 내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17'에 맞춰 K시리즈 4종과 스타일러스 등을 선보이는 것도 이같은 맥

락에서 수립된 전략으로 보인다. K시리즈는 '고성능 카메라와 차별화된 편의기능을 탑재한 실속형'을 코드로 내세웠다. 기존에 있던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한 대신 가격은 저렴해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물론 K시리즈는 'G6'나 'V30'에 비해 비중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제품 라인업의 출시 시기를 조금씩 앞당겨 기선 제압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뉴시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올해 절반으로”

금융권, '2017년 가계대출 관리 계획' 제출... 시중은행 5%대 설정

은행들이 내년도 가계대출 목표 증가율을 올해 증가율의 절반 수준인 5%대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2017년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제출했다.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은 평균 5%대로, 상대적으로 대출액이 적은 지방은행은 이보다 조금 높은 6%대로 목표를 잡았다.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증가율이 10.6%(67조4000억원)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반토막'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줄어든 규모다.

은행들은 지난해 가계 대출 계획을 세울 때 올해 증가율을 6~7%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목표치를 지난 9월 이미 초과 달성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재검토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중심 금융권의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빨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며 "내

년에는 가계대출 관리 계획이 지켜지도록 지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가계대출 규제도 강화돼 은행권이 무리하게 대출을 늘릴 가능성도 낮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던 집단대출과 비은행권에도 여신심사가 이드라인이 시행돼 비거치·원금분할 상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또 이달부터 DSR(총체적리금상환비율)이 도입돼 빚이 많은 사람은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뉴시스

자율주행차 올해 2만6000km 무사고

돌발 상황 등에 대한 대처는 아직 미흡

국내 자율주행차가 올해 2만6000km 무사고 주행에 성공했다. 다만 돌발 상황 등에 대한 대처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도교통부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자율주행차량 11대를 실제도로에서 자율주행모드로 총 2만 6000km를 시험운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시험운행 결과 사고사태는 없었다. 하지만 운전자가 주변차량의 갑작스런 끼어들기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해 10여 차례 수동 전환으로 직접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옆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일반차량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자율주행차 앞으로 끼어들거나, 차선이 지워진 도로 공사 구간에 자율주행차가 진입한 경우 운전자가 개입했다"고 전했다.

향후 국토부는 주행 실적 통계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의 진행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일반국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윤리 및 수용성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뉴시스

자율주행차 상용화될 경우 이윤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실제 자율주행차를 탑승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80%~90%대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탑승경험이 없는 전문가와 일반인은 30%~50%대 수준에 그쳤다.

이윤이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일반국민들은 운행 중 시스템 고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문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사고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에 따른 사후처리·법적 문제에 집중할 반면, 국민들은 사고발생 가능성 자체를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대부분(일반국민 72%, 전문가 68%)이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무도 타지 않은 자율주행차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책임은 제작사(38%), 소유자(30%), 공동 책임(31%)을 져야한다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시스

유일호 “대우조선, 충격 상당 부분 완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한해 진행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대우조선은 국가 경제적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했고 현대상선은 자구노력 성공을 통해 재도약을 준비 중"이라고 총평했다.

유 부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야기된 해운물류 혼란은 정부의 총력 대응을 통해 선박 14척 전량의 하역을 완료하는 등 3개월여 만에 사태를 수습했다"고 덧붙였다.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시행 4개월 만에 15건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는 등 선제적인 사업재편의 틀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구조조정 보완 대책을 통해 조선업 근로자들의 재기

를 지원하고, 관광선 조기 발주와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추경 예산을 통해 공공선박 58척을 발주했다. 3개 군항 추경 사업도 발주하기로 했다. /뉴시스

이통사, 연말연시 소통대책 시행

연말연시를 맞아 통신 트래픽이 3~4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동통신3사가 비상 소통 대책에 들어갔다.

2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새해 인사 통화와 메시지가 폭주할 것을 대비해 기지국 용량을 늘리고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보신각 주변, 소령센터, 고속도로, 스키장 등 인파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곳에는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뉴시스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진안고원 JINHWANG-GUWON